

코로나19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 세대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김민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규정하는 ‘엔데믹(Endemic)’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를 종료하였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활동들이 제한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은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는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였다(남윤민, 2021; 문진연·유미선, 2021; 여유진·오선정·송경희·류재린·김상현·김을식· . . . & 이지완, 2021). 이처럼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을 급격히 감소시켜 단절을 경험하게끔 만들었으며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자금 유동성 경직,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이 등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행 및 관광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의 감소, 가계 수입의 감소로 인한 나빠진 생활형편 등 가구 및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

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소득계층,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계층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21; 임동균·이장희·이재은·이주호·최중국·김연준·김지은, 2021).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정부에서는 거시적 및 미시적인 차원에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서 단순히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2020년 정부에서는 총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약 67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게 되었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돌봄부담가구, 농어민, 그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특히 단일한 재정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약 2,274만 가구에 약 14조 원을 지급하였다(여유진, 외, 2021). 이후 2~4차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2~4차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취약한 집단을 선별하여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어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들의 복지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분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은 물론 사회복지를 위해 증세에도 동의한다는 비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한 점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유진 외, 2021). 이는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를 바라보는 관점이 선별적이며 사회복지보다는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미친 영향 중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보편적인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주로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으로도 불리면서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계뿐만 정, 재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루어졌다(유영성·정원호·김병조·이관형·김을식·마주영, 2020).

이전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시행했을 때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비교하며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당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 중 만 24세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거나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이전의 논쟁과 차이가 있는 것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명목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고려해 보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2020년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쟁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약칭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정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비상사태 선포, 국경 봉쇄, 지역 간 이동 차단, 의료적 지원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여유진, 김성아, 2020; 남윤민, 2021).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거시적으로는 수출의 감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인해 생산성 둔화 및 역동성 저하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강현주, 2020) 미시적으로는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중,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에 대한 위기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또한 경제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위축된 소비활동을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하나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경제 및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② 추경예산(11.7조)을 포함한 총 32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금융시장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패키지, 업종별 긴급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민의 안전망 보장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현재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최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기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였고 다양한 부처에서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지역, 업종, 기한의 제한, 현금에 준하는 형태(지역화폐 및

전자화폐 등)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보편적인 정책이다(김을식·강정한·조무상·김숙영·송준모·유정균· . . . & 박민지, 2020; 남윤민, 2021).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현재 상황을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재난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시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의 쟁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부상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용 쏘카 대표는 2020년 2월 20일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하였고 이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경수 경남지사(1인당 100만 원/약 51조 원의 재원 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1인당 100만 원/일정 기간 내 소비/지역화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경제, 정치, 시민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코로나19 시기 동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발언

성명	반응	발언
----	----	----

+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보편성) 개개인(개별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무조건성) 정기적(정기성)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주류의 흐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이론으로 존재하였다.

성명	반응	발언
이재웅 (쏘카 대표)	긍정	-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씩 1천만명에게 주면 5조, 2천만명에게 주면 10조원입니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긍정	- 약 15조의 추경으로 온 국민에게 10일간의 휴식과 30만원의 일시적 기본소득 지급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긍정	-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과감성 있는 대책 필요 - 일시적 규제완화 등 투자소비 및 고용 심리를 깨워야 함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정	- 4.15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의 전형임 - 기본소득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폐기됨 -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되는 등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임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부정	- 취약계층에게 24조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책과 30조원의 생활 SOC사업이 있어 재원조달이 어려움 - 1년에 부가세로 걷히는 세수 70조원과 법인세로 걷히는 세수가 70조원인 우리나라에서 5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부정	- 정부 재정 여건상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정	- 기본소득은 단기 재정정책의 세 가지 원칙인 ‘적시성’, ‘특정성’, ‘한시성’ 에 모두 위배됨 - 어떤 특정계층 대상이 아니라 기본 사회보장제도의 대체로서 특정성이 없음 -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수당이라면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함

자료: 유영성 외(2020)의 내용을 발췌함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치계뿐만 아니라 재계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인식하여 이를 경험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럼 개인의 복지인식은 개인의 상황과 조건,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인식은 복지태도, 복지의식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용어들은 결국 개인이 사회현상 및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에 대해 어떤 신념 및 가치, 행동 성향(직접적 지지, 참여 등)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이한나·이미라, 2010; 여유진, 2011; 강정희·염동문, 2014; 김현정·이정은·노은영, 2015; 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특히 복지인식은 행동 성향을 강조하는 복지태도에 비해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나타낸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다(노혜진 외, 2018).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인식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논문에서는 복지인식의 개념을 복지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여유진, 2011; 김현정 외, 2015; 정세희·문영규, 2015). 결국 복지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둘러싼 사회현상에 대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행동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지인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이해관계론⁺에 근거한 사회적 지위 요인이다. 개인의 복지인식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기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이 있다(김영순·여유진, 2007; 이훈희·김윤태·이원지, 2011; 강정희·염동문, 2014; 정세희·문영규, 2015; 노혜진 외, 2018). 우선 성별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와 관계가 밀접한 것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친복지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valfors, 1997; 이훈희 외, 2011; 강정희·염동문, 2014; 정세희·문영규, 2015).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사회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등

⁺ 연구에 따라 사회화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노혜진 외, 2018) 또한 존재함

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친복지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만 노혜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서 증세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친복지적 성향을 가진다는 해석을 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세대변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복지인식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경향, 즉 친복지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훈희 외, 2011; 노혜진 외, 2018)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류만희·최영, 2009; 노혜진 외, 2018). 이처럼 연령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가 일관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이주희, 2014; 이정화 외, 2015; 노혜진 외, 2018). 가령 노령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인 반면 청년 또는 중장년세대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기보다 오히려 근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복지인식에 대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복지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Derks, 2005). 인간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동시에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인적자본은 미래의 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계층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사회계층을 질서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교육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복지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안상훈, 2009). 교육 수준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이훈희 외, 2011)와 이와는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에 부정적이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상존한다(류진석, 2004; 모지환·김행렬, 2009;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노혜진 외, 2018).

그리고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또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Hasenfeld & Rafferty, 1989; Edlund, 1999; 안치민, 1995; 백정미 외, 2008; 모지환·김행열, 2009; 이훈희 외, 2011; 강정희·염동문, 2014; 이지호·황아란, 2016).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친복지적 성향을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또는 자산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훈희 외, 2011).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수준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요인 중 하나는 계급 요인이 있다(이훈희 외, 2011; 강정희·염동문, 2014). 일반적으로 소득 계층이 낮은 사람, 낮은 고용상의 지위일수록 친복지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계급에 기반을 두고 정당이 만들어진 경험과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성균, 2002), 그리고 복지인식에 있어서의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훈희 외, 2011)을 지적하면서 계급 요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인식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지향과 규범적 태도에 근거한 정치적 요인이다. 개인의 복지인식은 평소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진보적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주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최유석, 2011; 이지호·황아란, 2016).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성향은 일반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배, 평등, 성장 등과 같은 가치관과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평등,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국가를 지지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개인은 성장을 강조한다고 보고한다. 즉,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부정적인 복지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서복경·황아란, 2012,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개인이 가진 정치 성향과 복지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테올로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평등, 소득 격차, 성장과 분배, 증세 등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정세희·문영규, 2015).

세 번째는 복지지위론에 근거한 복지이해관계 요인이다. 복지지위론에서는 개인의 복지인식은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경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

다고 설명하면서 ‘복지수급자’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로 구분하여 각 지위에 따라 복지인식이 상이하다고 설명한다(Gelissen, 2000; Andress & Heien, 2001; 류진석, 2004; 주은선·백정미, 2007; 강정희·염동문, 2014; 이지호·황아란, 2016; 노혜진 외, 2018). 복지수급자와 복지납세자는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입장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수급자의 경우 친복지적인 성향을,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복지납세자의 경우 반복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류진석, 2004).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주로 선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것인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혜 경험을 받은 시점에서 복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연·유미선, 2021). 상술한 바와 같이 복지수혜자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같은 복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경험은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지급 이후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부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책의 수혜는 직, 간접적으로 개인의 복지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인식 또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한 진형익과 이미숙(2020)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월 평균 소득, 기본소득 인지도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개인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에 대

해 찬성하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 수준에 따라 개인이 계층을 유지할 수도 또는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형익과 이미숙(2020)의 연구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인식 또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또한 수행되었다(김혜원·손연우, 2021; 남윤민, 2021; 임동균 외, 2021; 문진연·유미선, 2021; 최정은·윤선우, 2021). 우선 남윤민(2021)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복지와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가 재난기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임동균 외(2021)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인 기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수록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피드백 이론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문진연과 유미선(2021)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과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복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서 정책에 대한 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에게서는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에게서는 정책에 대한 효능감에 따라 복지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민(2021), 임동균 외(2021), 문진연과 유미선(2021)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김혜원과 손연우(2021), 최정은과 윤선우(2021)의 연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 인식과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은 동일하나 이를 세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혜원과 손연우(2021)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세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중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와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 수준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장년층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김혜원과 손연우(2021)의 연구와 유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의 실증적인 영향력을 세대별로 살펴본 최정은과 윤선우(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은 중고령층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또는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각 연구에서는 그 결과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과 복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그마다의 의미와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기본소득 도입 인식 또는 복지태도를 살펴보았지만 이와 같은 복지인식에 미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순수한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개인의 복지인식(복지태도) 또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복지인식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개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인식이 변화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개인의 복지인식이 어떠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점에서 개인의 복지인식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긴급재난지원금

의 순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순수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자료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에서 제공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이다. KGSS 데이터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 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연구를 하기 위해 축적되었다. KGSS 데이터에서는 개인의 생활, 노동,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2018 KGSS와 2021 KGSS 데이터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문항을 설문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 이후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 KGSS 및 2021 KGSS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 대상을 추출하여 총 2,270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기본소득 도입인식’ 을 측정하기 위해 2018, 2021 KGSS 데이터에서 사용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기본소득제도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소득 수준, 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하여 ‘① : 매우 반대’ 부터 ‘② : 매우 찬

성’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세대별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 대한 변수(시점변수)와 세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세대에 대한 변수(세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시점변수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의 시점으로서 2018년(2018 KGSS 데이터)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시점으로서 2021년(2021 KGSS 데이터)으로 구분하여 시점변수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세대변수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세대’, 35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세대’, 65세 이상을 ‘노년세대’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점변수와 세대변수를 각각 생성한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점변수와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시점변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세대변수의 상호작용항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는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 인식, 복지태도, 기본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강정희·염동문, 2014; 노혜진 외, 2018; 진형익·이미숙, 2020; 남윤민, 2021; 문진연·유미선, 2021; 임동균 외,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변수는 사회적 지위 요인으로 성별, 최종 학력, 고용형태, 가구 소득을, 정치적 요인으로 정치적 성향,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투입하였다. 각 통제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위 요인으로서 성별은 이분형 변수로서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은 연속형 변수로서 ‘0=무학’ 부터 ‘6=

대학원 이상'이다. 고용형태는 KGSS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변수 중 '취업 여부(취업, 미취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여부', '시간제 및 전일제 여부',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의 문항을 활용하여 고용형태를 구분하였고 이에 '취업', '상용직', '전일제'로 응답하였을 때는 '정규직', '취업', '임시직 및 일용직', '시간제'로 응답하였을 때는 '비정규직',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로 응답하였을 때는 '무급가족종사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앞의 문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서 '1=만원'부터 '21=만원'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은 '1=매우 진보적'부터 '5=매우 보수적'이라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1=매우 만족'부터 '5=매우 불만족'까지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청년, 중장년, 노년세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이중차이분석(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방법이다.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는 분석방법으로서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집단(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평균값의 변화폭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한치록, 2021: 171). 이와 같은 이중차이분석방법은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건 또는 재난 전후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연구에도 적합한 분석방법이다(남재현·이래혁, 2020; 김나영·김지우·신문정·남재현, 2021; 김이레·남재현, 2022).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인 2018년의 세대를 통제집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후의 시점인 2021년의 세대를 처치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차이분석방법의 일반적인 추정식은 다음의 식(1)과 같다.

$$y_{i,t} = \alpha + \beta_1 Treat + \beta_2 Time + \beta_3 (Treat \times Time) + \beta_4 Control + \epsilon$$

식(1)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속변수 y 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Treat$ 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을 받은 세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수준을 비교하며 세대는 $Treat_1$ 은 청년, $Treat_2$ 는 중장년, $Treat_3$ 은 노년세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기준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Time$ 은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 대규모 사건 등의 시행 또는 발생 전후를 구분하는 시점변수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시기, 즉 2018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Treat \times Time$ 은 세대변수와 시점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에게 미친 순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KGSS에서 제공하는 2018년 및 2021년 데이터를 STATA 1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 그리고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용된 추정식은 아래의 식(2)와 같다.

$$y_{i,t} = \alpha + \beta_1 Treat + \beta_2 Time + \beta_3 (Treat_2 \times Time) + \beta_4 (Treat_3 \times Time) + \beta_5 Control + \epsilon$$

식(2)

4. 분석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본적인 빈도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변수별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최종 학력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년세대의 경우 최종학력의 수준이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노년세대의 경우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노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규직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미취업자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세대 또한 미취업자의 비중이 중장년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대별 생애주기에 있어서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세대의 경우 은퇴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으며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 청년세대의 경우 취업자 외에 학생의 비중이 높아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년세대는 노년세대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노년세대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은 복지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고려해 본다면 청년세대는 노년세대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 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 명, %, 세, 점)

변수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	
관측치	연도	2018년	211(53.15)	576(44.58)	282(47.39)
		2021년	186(46.85)	716(55.420)	313(5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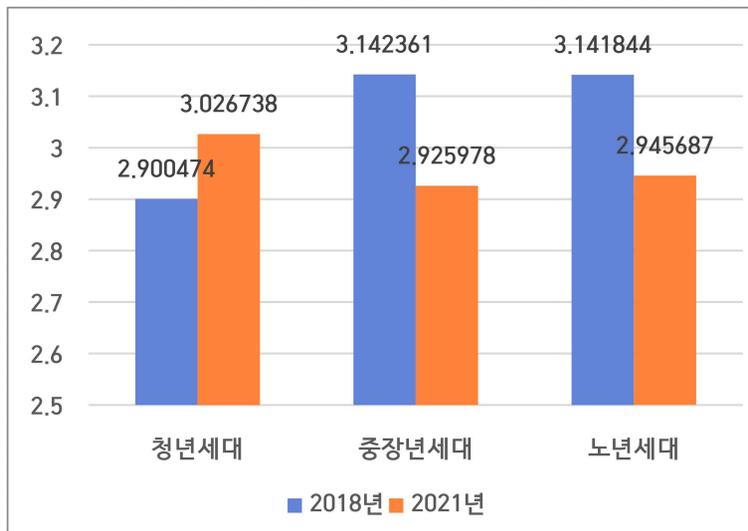
변수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	
사회적 지위 요인	성별	남	227(57.18)	507(39.24)	248(41.68)
		여	170(42.82)	785(60.76)	347(58.32)
	최종 학력	무학	-	9(0.70)	85(14.29)
		초등학교	-	57(4.41)	198(33.28)
		중학교	15(3.78)	123(9.52)	122(20.50)
		고등학교	69(17.38)	480(37.15)	129(21.68)
		대학교 이상	313(78.84)	623(48.22)	61(10.25)
	고용 형태	정규직	165(41.56)	421(32.69)	16(2.74)
		비정규직	45(11.34)	172(13.35)	87(14.87)
		미취업자	161(40.55)	306(23.76)	386(65.98)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26(6.55)	389(30.20)	96(16.41)	
가구 소득		10.34(5.41)	10.56(5.35)	4.50(3.71)	
정치적 요인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6(1.51)	34(2.63)	63(10.59)
		보수적	43(10.83)	268(20.74)	178(29.92)
		중도	160(40.30)	476(36.84)	162(27.23)
		진보적	162(40.81)	438(33.90)	159(26.72)
		매우 진보적	26(6.55)	76(5.88)	33(5.55)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61(15.37)	222(17.18)	106(17.82)
		불만족	151(38.04)	527(40.79)	187(31.43)
		보통	105(26.45)	314(24.30)	148(24.87)
		만족	75(18.89)	221(17.11)	138(23.19)
		매우 만족	5(1.26)	8(0.62)	16(2.69)
종속 변수	기본소득 도입인식	매우 반대	57(14.36)	125(9.67)	81(13.61)
		반대	68(17.13)	284(21.98)	111(18.66)
		보통	145(36.52)	457(35.37)	164(27.56)
		찬성	89(22.42)	289(22.37)	182(30.59)
		매우 찬성	38(9.57)	137(10.60)	57(9.58)

변수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	
----	------	-------	------	--

- 주 1) 이분변수는 비율을,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을 표기하였음
- 2)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반영한 값임
- 3) 상기 제시된 기술통계의 수치는 2018년과 2021년의 평균값임
- 4) 연속변수의 경우 t 값을, 비연속변수의 경우 χ^2 값을 제시하여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함
- 5) *: $p < .05$, **: $p < .01$, ***: $p < .001$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2018년과 2021년 평균값의 변화폭을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2018년에서 기본소득 도입 인식에 있어서의 평균값은 중장년세대, 노년세대, 청년세대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즉 중장년세대가 기본소득 도입의 찬성 비중이 높으며 청년세대는 기본소득 도입의 찬성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2021년에서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2018년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평균값은 상승한 반면 중장년세대 및 노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평균값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해 청년세대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중장년세대 및 노년세대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 변화(2018년→2021년)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영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우선 전체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 지위 요인에서는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정치적 요인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전체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위 요인 중 교육 수준의 경우 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5, S.E = .030$). 그리고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8, S.E = .005$).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 중 정치적 성향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7, S.E = .005$).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바인 세대변수와 시점변수,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세대변수를 살펴보게 되면 청년 세대에 비해 중장년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2, S.E = .087$). 이와는 반대로 노년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점변수를 살펴보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점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세대변수와 시점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순수한 영향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청년세대에 비해 중장년세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6, S.E = .114$). 하지만 노년세대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세대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대한 변화와 영향 요인

변수	기본소득 도입인식	
	B	S.E

변수		기본소득 도입인식		
		<i>B</i>	<i>S.E</i>	
세대변수 <i>Treat</i> (ref.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192*	.087	
	노년세대	-.074	.122	
시점변수 <i>Time</i> (ref.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103	.097	
<i>Treat</i> × <i>Time</i> 상호작용항(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중장년세대 × 2021년	-.306**	.114	
	노년세대 × 2021년	-.116	.148	
사회적 지위 요인	성별(ref. 남성)	-.008	.049	
	교육 수준	-.095**	.030	
	고용형태(ref. 정규직)	비정규직	-.049	.082
		미취업자	-.120	.063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095	.066
가구 소득	-.018***	.005		
정치적 요인	정치 성향	.257***	.005	
	정치 상황 만족도	.077	.025**	
_Cons		2.576***	.192	
F		15.48		
관측치		2,270		
Adj R-squared		.077		

주 1)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반영한 값임

2) *: p<.05, **: p<.01,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KGSS의 2018과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있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존의 사회계층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복지인식에 긍정적인, 즉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그 반대인 기존 사회계층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류진석, 2004; 모지환·김행렬, 2009;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 2013; 노혜진 외, 2018). 이는 결국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야만 도입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낮을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개인의 복지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훈희 외, 2011). 반대로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될 가능성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복지납세자로서의 위치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경우 특수한 경우(미국 알래스카주와 같이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알래스카 배당기금을 만든 경우)를 제외한다면 국민들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은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 가치에 따라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주은선·백정미, 2007; 서복경·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셋째,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비해 중장년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반대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노년세대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중장년세대와 그 결과값이 동일한 방향으로 노년세대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의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및 노년세대 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세대별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우선 납세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세대의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Hasenfeld & Rafferty, 1989; 류진석, 2004). 청년세대 또한 납세자로서 위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으로서의 위치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기술통계를 확인해 볼 때 청년세대의 경우 취업자로서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미취업자의 비중 또한 중장년세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에 비해서 중장년세대가 더욱 납세자로서의 위치를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납세자로서의 위치로 인해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의 반대 인식이 확대된 것이라면 노년세대는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납세자라기보단 수혜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중차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노년세대도 중장년세대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반대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세대가 가지는 정치적 신념 및 가치가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주은선, 백정미, 2007; 서복경, 황아란, 2012, 김윤태 외, 2013). 그렇기 때문에 노년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를 확인해 보아도 청년세대 및 중장년세대에 비해 노년세대의 정치적 성향 중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보다는 경제성장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 국민은 보편적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이 반드시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과 기본소득 도입인식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결되어야 할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알래스카주를 제외하고 현재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며 미국 알래스카주조차도 영구배당기금의 재원은 천연자원(석유)에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알래스카주의 시민들은 영구배당기금에 큰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순위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증세 또는 새로운 세금 명목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 또는 새로운 세금 명목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된 납세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세대, 소득 상위계층 등은 더욱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기본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저항감이 발생하여 기본소득 도입인식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계획(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일관적으로 정책의 도입부터 시행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증세 또는 새로운 세금 명목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증세 또는 새로운 세금 명목은 국민들의 저항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권, 정치인 등은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불러일으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기본소득 도입인식은 반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감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일

관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국민들의 기본소득 도입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이 가지는 한계이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전후로 세대별 기본소득 도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KGSS에서 제공하는 2018년 및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이중차이분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8년 및 2021년에 응답한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되어 동일해야 하지만 KG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횡단데이터로 구축되어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및 2021년에 응답한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다. 각 세대의 기본소득 도입인식 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KGS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도 2차년도 연속으로 기본소득 도입인식과 관련한 문항을 조사한만큼 누적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기본소득의 효과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실증자료를 통해 미래의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정희·염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2): 319-351.
- 강현주, 2020, 『한국 경제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KCMI] 이슈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 김나영·김지우·신문정·남재현, 2021, “지역고용위기가 주관적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1): 41-63.
- 김사현, 2010,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213-239.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을식·강정환·조무상·김숙영·송준모·유정균·이성우·배영임·최성환·유영성·김재신·신혜리·박민지, 2020,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1-252.
- 김이레·남재현, 2022,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102-121.
- 김현정·이정은·노은영, 2015, “Q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인식 유형화 연구”, 『사회복지연구』, 46(4): 321-349.
- 김혜원·손연우, 2021,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47(3): 103-130.
- 남윤민,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177-204.
- 남재현·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 노혜진·이현옥·김윤민, 2018, “제도별 복지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

- 초연금, 청년배당, 무상급식, 보육료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1): 79-105.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 79-101.
- 문진영·유미선, 2021, “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정책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3(4): 29-55.
- 모지환·김행렬,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4(1): 179-199.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서복경·황아란, 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 고령자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 5-34.
- 안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적 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7.
- 여유진, 2011, “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상황과복지』, 32: 7-44.
- 여유진·김성아, 2020,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82: 1-12.
- 여유진·오선정·송경희·류재린·김상현·김을식·김양중·남종석·김문길·이원진·우선희·손창균·노법래·송치호·허재준·문현경·박희석·노승철·최훈·김윤영·이민정·홍성운·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보고서.
- 유영성·정원호·김병조·이관형·김을식·마주영,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슈&진단』, 1-25.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 205-228.

- 이정화·문상호, 2015, “한국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지태도 예측”,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165-194.
- 이주희, 2014,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비교”, 『경제와사회』, 103: 129-165.
- 이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 73-99.
- 이지호·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복지국가 유형과 정부의 질, 자기이익”,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 이훈희·김운태·이원지, 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임동균·이장희·이재은·이주호·최중국·김연준·김지은, 2021,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실증 분석 : 충청도민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2(1): 117-138.
- 정세희·문영규, 2015,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5(4): 23-46.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진형익·이미숙, 2020,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33(5): 1607-1629.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 57-83.
- 최정은·윤선우, 2021, “코로나 시대 세대 간 복지태도의 정책적 함의 : 정치이념과 긴급재난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4): 735-757.
- 한치록, 2021, 『패널데이터강의(제3판)』, 박영사.
- Andress, H. J.,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337-356.

- Derks, A., 2005,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Welfare Attitude in Six European Countries" , *Paper for the Espanet Conference 2005, University of Fribourg, Switzerland, September: 22-24.*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341-370.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ized solidarity :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285-300.
- Hansenfeld, Y., &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 *Social Forces*, 67(4): 1027-1048.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 13(2): 283-304.